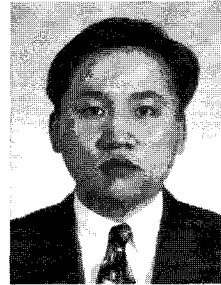


OECD 가입에 따른 에너지부문의 대응방안



전 민 영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사무관

I. OECD가입의 의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OECD측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GNP 및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육박하고 있고 1인당 GNP도 이미 1만불을 상회하고 있는 바, OECD를 위시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경제력 및 경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과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수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OECD 회원국들은 이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OECD가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세계경제를 운용해 가는 선진국들과 각종 경제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선진국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특히, OECD 가입은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운용과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경제제도 및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외에도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거시경제 운영의 어려움,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의 심화, 개도국 지위 유지의 어려움, 환경의무의 부담증대 등 앞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들도 부각될 것이다.

에너지부분의 경우에도 OECD가입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새롭게 수행해야 할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OECD가입에 따른 에너지부분에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II. OECD가입에 따른 에너지부분에의 영향

1. OECD가입 협의 결과

OECD가입협약의 금융, 노동, 환경 등 여러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협의 결과중 에너지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은 투자자유화 및 환경부문 심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심사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가입심사과정에서 OECD 투자규범을 수용하기 위해 투자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업종별 투자자유화에 노력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에 있어서 가입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M&A형 직접투자와 5년 이상의 장기대부의 자유화, 그리고 금융업 투자 개방 등이었다. 한편 해외투자 분야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자기자금 조달의무는 98년초 폐지하기로 하고 유보에 포함하였다.

OECD 가입심사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율하는 “외자도입법”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9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제한되는 미개방업종 또는 부분개방업종의 개방일정을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유화가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을 확대함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하거나 OECD회원국 대부분이 유보하고 있는 업종과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곤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개방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거나 2000년 이후에도 미개방업종으로 유보하였다.

이에 따라 미개방업종은 1997년 1월 현재 30개에서 2000년 1월 현재 18개로 줄어들게 되어, 자유화율은 1997년 1월 현재 97.4%에서 2000년 1월 현재 98.4%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부분의 경우 석유부문은 99년까지 도소매업 등 모든 부문을 개방토록 하였고, 전력부문은 금년부터 50%이내에서 민자발전사업에 투자를 허용하였으며, 향후 사업결과 검토를 통한 투자범위 확대를 약속하였다. 하지만, 전력 송배전 및 가스배관망사업 등은 2000년이후에도 미개방업종으로 유보하였다.

한편, OECD의 규약 178개중 71개가 환경분야로서 환경부문은 OECD 가입 관련 국내제도 정비과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규약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분야는 화학물질분야로서, 화학물질의 신고, 위해성평가, 화학물질데이터 정보교류, 사고예방 및 조치,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유해화학물질 오염배출 및 이송등록제도(PRTR)등 국내제도의 정비와 투자를 요하는 과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총 65개의 환경관련 규약을 대부분 수락하였으며 이중에는 유보기간 등을 요구하여 조건부로 수용한 규약이 12개이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가 많은 OECD의 환경규약을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에 우리의 환경정책이 도달해 있음을 말한다.

환경부문에서 에너지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며, OECD가입에 따른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는 각종 규약의 이행보다는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상에서의 지위변화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개도국의 지위에서 각 협약에 대응하였던 우리나라는 OECD가입 협상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입후의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OECD가입이 선진국의 의무이행으로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2. 에너지부문의 영향

가. 긍정적 효과

에너지부문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익은 우선 OECD의 독립기구이며, 현재 모든 OECD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제1차 석유파동 직후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유국공동체인 OPEC에 대응하고자 1974년 IEP협정에 따라 에너지소비국중 선진국들이 OECD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주요기능은 석유생산국 및 비회원 석유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에너지교역의 안정과 에너지자원의 합리적이용도모,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추진, 석유공급의 주요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비상시 석유유통을 위한 대책 수립, 국제 석유시장 및 석유회사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이다. 우

리나라는 에너지소비국으로서 동기구 가입을 통해 OECD 선진국가들과 정책협약이 가능해지고, 비상시를 대비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OECD 정보망 및 통계자료, 관련회의 등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기술에 관한 첨단기술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시장의 개방등으로 에너지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개도국 시장에서의 진출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정적 효과

OECD가입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부문의 대응과제는 환경부문에서의 부담증가일 것이다. OECD가입협약시 OECD가입후에도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로 보장받았으나, 앞으로 전개될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부속의정서협상 등에서 EU, 미국 등으로부터 기후변화협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자유화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OECD국가들은 에너지산업에 있어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효율적 운영 및 투자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자유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92, '9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IEA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조사 보고서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합리적 가격결정과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권고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입을 추진할 경우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현재 가입시 예상되는 의무사항으로는 90일간 소

비할 수 있는 수준의 석유비축, 석유공급 부족사태의 발생시 석유소비의 7-10% 수요억제 실시 및 유사시 IEA결정에 대한 비축석유 할당, 석유회사 활동에 관한 정보와 석유수급, 비축수준, 수송능력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보고 등이다.

3.OECD국가들의 에너지정책

OECD국가들이 지향하는 에너지정책은 1993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IEA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공동목표(Shared Goals)"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공동목표안에서 OECD국가들은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라는 정부의 과제외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목표(Shared Goals)는 9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선 에너지부분의 다변화, 효율화, 신축성이 장기적인 에너지안보를 구축하는 기본요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시스템이 에너지위기시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환경규제정책의 추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사용, 신 에너지기술의 적극 도입 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한편, 환경보호나 에너지안보의 증진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와 에너지소비자 모두의 노력을 강조한다.

에너지가격이 사회적 또는 산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공급비용 이하로 낮추어져서는 안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과 안정된 투자제도가 에너지시장의 효율화와 에너지안

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지적한다.

Ⅲ.국내에너지부분의 현황과 특성

1. 에너지 수급구조의 불안정성 심화

1985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8.7%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0.3%이상 증가추세가 지속됨으로써 국민경제의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대수의 증가 및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수송용, 산업용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에너지 소비의 석유의존도가 '85년 48.2%에서 '95년 62.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의 석유의존도가 30-4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를 수입에너지로 충족함에 따라, 에너지 해외 수입의존도와 에너지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에너지수입의존도 96.8%이고, 총수입액도 186억불로서 총수입의 138%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48.1%이며, 석유의 중동의존도는 77.8%에 이르고 있다.

2. 에너지 수요의 고급화 추세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낮은 에너지가격 추세에 힘입어 석유, 가스, 전력 등의 고급 에너지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인 무연탄의 수요는 격감하고 있다.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1992년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에너지/GDP(TOE/'90년\$)	0.421	0.146	0.221	0.216	0.193	0.134

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질유와 중질유(BC유 등) 제품간의 수급 불균형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이용기기의 보급확산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냉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국배관망 건설과 환경요인 등에 힘입어 가스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상업용 연료로서의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3. 환경 요인 증대 및 투자 제약 요인 심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의 이용에 대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및 저유황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전소 추가건설, 석유정제설비 증설 및 고도화시설 설치, LNG 인수기지 및 배관망 건설, 비축시설 등에 필요한 투자소요는 증대하는 반면, 재원 조달은 저에너지가격정책과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에 비추어 어려운 실정이다.

원전 등 발전소와 폐기물처리장 등 에너지 관련 입지확보가 에너지시설에 대한 지역적인 수용성의

한계 등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4.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에너지소비로 인해 에너지수입이 국민경제의 부담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총생산 부가가치 한 단위를 창출하는데 일본과 이태리에 비하여 3배,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는만큼, 에너지 절약과 수요 관리로 공급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5.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에너지 산업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전력, 가스 등은 공기업형태로 운영되거나 석유와 같이 신규 진입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과 안정공급에 기여하였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일부 에너지산업에서는 규제 및 경쟁제한에 의한 비

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VI. 에너지부분의 대응방안

1. 국제에너지기구가입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전략수립

OECD가입결정후 국제에너지기구 가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국제에너지기구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가입시기 및 의무사항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사항중 당장 이행할 수 없는 부문은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OECD 가입 이후에도 당분간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협상논리와 전략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범국가적·범부처적 환경-경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의 통합이 없이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산업정책·환경정책·협상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과거 운영되었던 "지구환경대책기획단"과 같은 범부처적 의사결정조정기구가 구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국가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수급전략을 수립하고, 부문별 실천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2.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체계의 구축

에너지(Energy)는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

큼 이들 3E가 상호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 및 OECD국가들의 환경의무 부담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석탄·석유 등도 환경보전시설을 갖추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청정에너지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천연가스의 보급도 확대하는 동시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차량의 보급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관련 비용 부담을 에너지가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개별 에너지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하여 에너지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에너지·자원정책도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규제만을 유지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개방과 참여의 확대를 통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1997년부터 국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이 전면 자유화되고, 석유수출입도 자유화되는 동시에,

1999년부터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진입도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는 한편, 외국인에도 투자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유통구조개선과 석유비축의무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석유사업법시행령 등 관련법령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는 인수기지 및 전국공급배관망을 계획대로 건설해 나가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민자발전과 더불어 전기공사업 등에 대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력분야 규제완화를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 경쟁력이 있는 전력산업, 정유산업, 지역난방사업 등 에너지 산업도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에너지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에너지 효율화 사회의 기반조성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에너지기구의 가입을 위해서도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연계하여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원적으로 에너지절약형 경제·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절약의 추진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형 가격제도로의 개선,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 에너지공급자의 통합자원계획추진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주체를 다원화하여, 민간기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며, 각 부문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절약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온 절약정책의 틀을 개방하여 시장기능에 입각한 민간부문의 절약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